

< 要 約 >

I. 金正日の 등극 時期와 그 條件

- (時期와 條件) 김정일은 행사 비용, 권력 재편, 대내외 정책 조정 등 그 여건만 갖추어지면,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등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등극을 위한 내외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김정일의 등극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며, 사실 등극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기본적으로 불가능함
- (意味) 외교적으로 볼 때, 김정일의 등극은 북측의 교섭 상대자를 명확히 해 준다는 의미가 있음
 - 그러나 북한 내적으로 볼 때, 김정일의 등극은 하나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며, 명목상의 공식 승계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음
- (世代 交替) 혁명 1세대 원로에서 40~50대의 개혁적인 젊은 테크노크라트로 실질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II. 北韓의 改革·開放 展望

- (開放) 북한은 40~50대의 개혁적인 젊은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확실히 잡음
 - 이와 관련 북한은 주민 통제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한편, 軍은 본연의 임무 즉 체제 유지와 안정을 담당하는 쪽으로 그 역할과 영향력을 점차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음
- (改革) 북한의 기본 방향은 개방 확대이며,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간다는 정책인데, 경제 개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경제 개혁을 가로 막고 있는 현행 경제 관리 체계와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
 - 군수 산업의 민수 전환이 필요하며, 北韓軍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은 평화 협정 체결임
 - 김정일 1인에게 과다하게 몰려 있는 결제 사안, 결제의 잦은 변경, 측근 정치 등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개혁 조치도 필요함

III. 우리의 對應 方向

- (北韓의 戰術) 북한은 대남 도발 위협과 같은 강경 전술과 아울러 경험 추구와 같은 온건 전술이라는 양면 전술을 계속 구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對應 方向)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개방에 대해서는 남북 경협을 확대해 나가는 이중 전술이 요구됨
 - 정치 군사적으로 얼마간 긴장과 대립이 있더라도 强者로서 보다 유연하고 당당하게,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경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내년 2월 이후 남북 경협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경 등지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준비·진행하고 있음

I. 金正日의 登극 時期와 그 條件

- (時期와 條件) 김정일은 행사 비용, 권력 재편, 내외 정책 조정 등 여건만 갖추어지면,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등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등극을 위한 내외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김정일의 등극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임
- (意味) 외교적으로 볼 때, 김정일의 등극은 북측의 교섭 상대자를 명확히 해 준다는 의미가 있음
 - 그러나 북한 내적으로 볼 때, 김정일의 등극은 하나의 요식 행위에 불과하며, 명목상의 공식 승계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음
- (世代 交替) 혁명 1세대 원로에서 40~50대의 개혁적인 젊은 테크노크라트로 실질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김정일의
등극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 (시점) 등극을 위한 내외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김정일의 등극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임
 - 김정일이 등극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 현재 등극 시기와 관련하여 9월 9일 정권 창건 기념일,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2월 16일 김정일 생일 등 3가지說이 거론되고 있음
 - 그러나 등극 시점을 예측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사실 시기 문제는 이제 큰 의미가 없음
 - 김정일은 자신의 등극 시기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여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라도
등극할 수
있을 것임

- (조건) 김정일은 행사 비용, 권력 재편, 대내외 정책 조정 등 그 여건만 갖추어지면,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등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북한 체제의 속성으로 보아, 김정일의 등극은 전국적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동반할 것이며, 거

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임

- 예컨대 금수산 기념 궁전 등 김일성 관련 행사에
지금까지 3억 달러 이상 들어 갔음
-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행사를 위한 경비 조달이 쉽지 않은 상태임

행사 경비 문제 등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있음

○ (권력 구조) 국가 주석 선출 문제와 관련하여, 권력 구조 조정을 위한 북한의 헌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김정일이 우선 당 총비서를 승계하고, 나중에 국가 주석을 승계할 수도 있으나, 당 총비서만 승계하고 국가 주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누가 국가 주석을 승계하든, 그에 따른 헌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김정일이 국가 주석을 승계할 경우, 국가 주석과 국방위원장을 단일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함
 - 현행 헌법은 二重 권력 구조로 이 양자를 분리해 놓았음(현재 김정일의 직위는 국방위원장)
- 둘째, 국가 주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국가 주석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헌법 개정이 필요함
 - 현행 헌법상 국가 주석은 국방위원장보다 상위 기구임
- 셋째, 국가 주석을 아예 폐기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이나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주권을 대표하는 형태로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음

아직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권력 구조와 내외 정책 조정이 쉽지 않은 상태

○ (정책 조정) 북미 관계 등 현 정세가 아직 유동적이어서 정책 조정도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님

- 총비서 취임시 김정일은 당 대회에서 사업 총화 보고를 통해 당 건설 노선, 경제 건설 노선, 대외 노선 등에 관해 총결산을 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함
- 그러나 총 결산과 정책 전환을 하기에는 상황이 아직 유

동적이라 할 수 있음

- 예컨대 미국을 제국주의에서 풀어주는 것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치와 관련이 있는데, 이 문제가 아직 유동적이어서 지금 북한이 대미 노선을 천명하기에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할 수 있음

김정일의 등극은 교섭 상대자를 명확히 해 준다는 의미가 있음

○ (등극 의미)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의 등극은 북측의 교섭 상대자를 명확히 정해 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그러나 북한 내적으로 볼 때, 김정일은 현재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등극은 하나의 요식 행위에 불과함
- 따라서 명목상의 공식 승계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혁명 1세대에서 테크노크라트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 (세대 교체) 빨치산 혁명 1세대는 점차 2선으로 물러나고 40~50대의 테크노크라트가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명목상으로는 老·長·靑 결합으로 혁명 선배를 존대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혁명 1세대 원로들을 점점 후퇴시킬 것으로 보임
- 북한의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40~50대의 지도자들은 해외물도 많이 먹고 해서 융통성 많은 사고를 하는 등 지식과 능력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음
 - 이들은 스스로를 변화의 주체 세력으로 보고 있음
- 이들은 그동안 한국 기업 등 서방과의 접촉을 통해, 자본주의 기업과의 사업과 관련된 많은 것을 학습하였음
- 그러나 이들은 法人과 起債에 대한 개념 부족 등 아직 학습이 부족하며, 학습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음
 - 현재 북한은 나진 선봉, 남포, 원산 등에 법인격과 유사한 형태의 회사들을 만들어 가고 있음

II. 北韓의 改革·開放 展望

- (開放) 북한은 40~50대의 개혁적인 젊은 지도자를 주축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확실히 잡음
 - 이와 관련 북한은 주민 통제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軍은 본연의 임무 즉 체제 유지와 안정을 담당하는 쪽으로 그 역할과 영향력을 점차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음
- (改革) 기본 방향은 개방 확대이며,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간다는 정책인데, 경제 개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개혁을 가로 막고 있는 현행 경제 관리 체계와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함
 - 군수 산업의 민수 전환이 필요하며, 평화 협정 체결은 그 선결 조건임
 - 김정일 1인에게 과다하게 몰려 있는 결계 사안, 결정의 잦은 변경, 측근 정치 등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개혁 조치도 필요함

1. 開放 擴大와 軍의 位相 變化

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힘

- (개방) 북한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적인 40~50대 젊은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대외 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확실히 잡은 것으로 판단됨
 - 그들은 대외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을 뚫고 들어가 생존하는 것을 ‘빨치산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이들이 빨치산식 전통을 강조하는 것은 군부의 입김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빨치산 전통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합리화를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고 있음
 - 북한 지도부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사고는 보다 개방적인 사고로 전환될 것임
 - 금년 1월 김정일은 당·정·군의 주요 경제 일군들이 참여한 대규모의 확대 경제지도협의회를 주재하였는데, 주

된 의제의 하나는 개방 확대 조치에 관한 것이었음

· 이는 김일성의 유훈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것임

- 따라서 앞으로 북한은 당이 중심이 되어 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등 보다 가시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갈 것임

· 북한은 정무원 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이 나진 선봉 개발을 맡아서 일이 잘 안되었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당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개혁·개방을
위해 군부의
역할과 영향력
도 점차
후퇴할 것임

○ (군의 위상) 군의 영향력은 본연의 임무 즉 체제 유지와 안정을 담당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힘

- 개혁·개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군부의 역할을 약화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음

- 그러나 김정일이 지난 3년 동안 군부의 위상을 지나치게 높여 놓아, 그것을 한 순간에 꺾어 내리기는 어려울 것임

- 기본적인 방법은 군의 영향력을 당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될 것임

- 즉 군 지도부를 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으로 끌어들이거나 승진시키는 방법으로서, 김정일이 군부의 승진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조치의 일환임

· 그러나 군이 김정일의 권위에 도전할 경우, 김정일은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단행할 것임

- 대외 무역과 관련해서도 군의 마구잡이식 참여와 같은 그동안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군은 몇 개의 큰 프로젝트만 먹고 작은 것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군을 안정화시면서 경계를 나누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음

변화와 개방
속에서도
주민 통제 정책
은 계속될 것임

○ (주민 통제) 개혁·개방에도 불구하고 주민 통제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 북한 당국은 개방을 하면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이 불가피하게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실제로 북중 국경 지대에 사는 북한 주민들의 사고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여기서 북한 당국의 이중 정책이 나타나는 데, 개혁적인 젊은 지도부는 생존을 위해 변화와 개방을 추구하되,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임

2. 改革의 條件과 金正日의 政治 行態

경제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 경제 관리 체계와 방법에서 먼저 변화가 있어야 함

○ (경제 개혁)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김정일의 기본적인 판단이지만, 현시기 정책의 기본 방향은 어디까지나 개방 확대이며,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임

-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지방 분권화와 기업 자율성의 증대를 추구하여 왔음
 - 즉 북한은 식량도 지방 단위의 자급 자족을 강조하며, 심지어 軍도 식량을 자급 자족하라 해서 군이 직접 농장을 경영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음
- 그럼에도 경제 개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당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로 되어 있는 현행 경제 관리 체계와 방법을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북한의 경제 개혁을 위해서는 경제 관리 체계와 방법을 김정일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임

군수 산업의 민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평화 협정 체결이 필요함

○ (군수 산업) 북한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군수 산업의 민수 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북한 경제에서 자원의 50% 이상이, 그것도 가장 좋은 물자가 군수 부문(제2경제위원회)으로 들어가고 있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음
 - 이런 상태에서는 민수 부문의 제약이 심각할 수밖에 없고, 개혁을 하더라도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경제 발전을 위해 군수 부문에 대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임
 - 군수 부문의 축소는 군의 반발을 가져올 것임
- 북한의 군부는 현재 군수 산업의 민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미간의 평화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그러나 군수 산업의 민수 산업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어도 그 효과는 10년 이상 가야 나타날 것임
 - 결국 북한의 경제난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북한의
정치 시스템의
개혁도 필요함

○ (김정일의 정치 행태) 경제 효율성 증대를 위해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의 변화도 필요함

-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측근 정치·실세 정치, 즉 자기 마음에 드는 측근들을 몰고 다니는 정치임
 - 이것은 '나의 의사 결정은 이 사람들이 대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사람들이 각 부문에서 힘을 발휘하게 됨
- 김정일은 측근 정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런데 김정일이 자신의 결정을 자주 바꾸어서 문제임
 - 이 때문에 당·정·군의 모든 부문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음
- 게다가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김정일이 다 보고받고 결재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여서 체제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 김정일의 결재를 받은 일은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임
- 서로 다른 두 개의 라인에서 동일한 내용의 결재가 올라와 두 개 모두 결재받아 이것이 나중에 서로 충돌하는 예도 있음
- 김정일의 등극 이후, 이상과 같은 정치 시스템의 정비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

III. 우리의 對應 方向

- (北韓의 戰術) 북한은 대남 도발 위협과 같은 강경 전술과 아울러 경협 추구하고 같은 온건 전술이라는 양면 전술을 계속 구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對應 方向)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개방에 대해서는 남북 경협을 확대해 나가는 이중 전술이 요구됨
 - 정치 군사적으로 얼마간 긴장과 대립이 있더라도 强者로서 보다 유연하고 당당한 자세를 갖고,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남북 경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내년 2월 이후 남북 경협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경 등지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준비·진행하고 있음

북한은
위협 강경 전술
과 경협 온건
전술이라는
양면 전술을
계속 구사해
나갈 것임

○ (북한의 전술) 북한은 체제 생존, 정권 생존을 정책적 목표로 하여, 위협 강경 전술과 온건 대화 전술이라는 이중적 틀 속에서 다양한 세부 전술을 개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먼저 북한은 모험주의적인 대남 도발 위협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일의 측근 정치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의 말만 들어 정책을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태가 잘못되면 수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즉 측근에 의존하는 정치에는 전쟁과 같은 위험 요소도 함께 따라 다니는 것임
- 다른 한편 북한은 대외 개방을 확대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을 끌어 들이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북한은 앞으로 남북 정상 회담까지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그 조건이 성숙되지 않고 있음

○ (우리의 대응) 북한의 전쟁 준비에 대해서는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개방에 대해서는 남북 경협 확대에 대응하는 이중 전술이 요구됨

안보 태세 강화
와 경협 확대라
는 양면 전술이
요구됨

- 현재와 같은 우리의 대북 단선 구조를 미국과 같은 대북
복선 구조로 바꾸어야 할 것임
 - 다소 독립적인 원칙과 명분을 갖는 다수의 개별적인 정
책 수단을 병행해서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즉 정치 군사적으로 약간의 긴장이나 대립이 있더라도, 장
기적으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남북 경협을 지속적으
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남북한의 정치 관계는 그 특성상 부침을 거듭하기 쉽지
만, 경제 관계까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임
- 정치 관계가 악화될 때 이를 기준으로 경제 관계에 제약
을 가할 경우,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 특정 시점에서 각 정책간의 일관성을 지나치게 추구하
다 보니, 개별 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이 저해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임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되지만, 남북한
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북한의 경제
관계를 지금보다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내년 2월 이후
남북 경협이
크게 확대될
전망

- (남북 경협)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반영하여, 남북 경
협 확대 등 强者로서 보다 유연하고 당당한 대북 접근
자세가 요망됨
 -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북경 등지를 무대로 활발하게 사
업을 진행하고 있음
 - 어떤 시기에 어떤 수준의 자리에까지 가 있어야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것임
 - 북측과 술한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 놓았다가, 다음 정권
에 가면 붓물터지듯이 남북 경협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북한 역시 내년 2월 이후에 남북 경협이 확대될 수 있
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현재 북한은 남한 기업도 좋은 데, 다만 제3국 법인 명의

로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음

· 그것은 남한 기업이 한국 명의로 북한에 들어갈 경우,
북한 내에서 허가받을 게 너무 많기 때문임

- 북한이 실리주의를 주장하면 우리도 실리주의적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함

안보와 경협을
이분화시키지
말고, 양자를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것

- (결론) 안보 대비 태세를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지만, 안보와 경제를 이분화시켜 지나치게 대립적으로 해석해서 정책의 단절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임

- 전쟁 억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평화 정착 등을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하여 정부와 민간 부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요컨대 안보와 경협,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면 안될 것이며 양자를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임

(정리 : 이태섭)